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비용절감·자체수입 확충방안 ‘시급’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 전남광주 예산비교 분석 통합행정 예산 20조8040억원...국비 의존도 높아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전남·광주 예산비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예산규모는 전남 12조7023억원, 광주 8조1017억원이며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20조8040억원이다.

또 공기업과 기금·교유청 등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전남은 18조56163억원, 광주는 12조4548억원으로 총 31조711억원 규모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 총액은 전남 10조4587억원, 광주 6조271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재원은 전남이 2조5741억원, 광주가 2조2235억원이지만 각각 비중이 24.6%, 35.46%를 차지했다. 광주가 지방세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 비중은 전남 71.9%, 광주 57.6%로 두 기관 모두 중앙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았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도 보조금이 8조520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50.9%를 차지했다.

세출구조는 광주의 경우 46.9%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원됐으며 교통분야가 10%인 도시형 예산 구조인 반면 전남은 농림해양수산 18.8%, 환경 8.6%, 공공질서·안전 7% 등의 비중이 높은 광역 행정형

구조다.

통합특별시로 분석하면 사회복지가 6조56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9.3%를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 2조324억원(12.1%), 일반공공행정 1조58142억원(10.8%), 환경 1조400억원(6.2%), 교통·물류 9617억원(5.7%), 공공질서 및 안전 8243억원(4.9%), 교육 7182억원(4.3%) 순이다.

전남의 예산이 광주보다 1.6배 많지만 재정자립도는 23.4%로 광주 33.9%에 비해 낮으며 전남도와 광주시 모두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상태로 전남 -2170억원, 광주 -290억원이며 통합 후에는 -2460억원이다. 다만 전남은 순세계영영금을 반영하면 적자 -1173억원으로 완화된다.

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 산업 등

신산업 투자와 복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 전남의 5년평균 예산 증가율은 2%이며, 광주는 2.8%로 파악됐다.

통합특별시 기준으로는 올해 21조5740억원에서 2030년 23조6621억원으로 연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토대로 전남과 광주는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권이 제한적임에 따라 통합 후에도 자체재원 비중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돼 특별시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통합 후 초기에는 인프라·디지털 전환·사회서비스 표준화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수입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경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일자리 정책 모색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 개최 일자리·청년발전재금 활용...지역정책 지원 방안 논의

광주시는 12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연계한 청년 정책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이날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부터 주거안정,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지역사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청년 삶 전 반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통합특별법에 반영된 '청년발전기금'이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청년의 첫 경력 형성 지원, 취업 연계, 지역 정착 유도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들은 통합으로 인한 청년정책 변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 서울'이 아닌 '인 광주전남'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의 출발점일 뿐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목표를 교통·경제 중심도시로 재편”

민형배, 목표역세권 대개발·서남권 광역BRT 구축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목표역세권 대개발과 서남권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한 '목표 교통·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12일 정책 발표를 통해 "목표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며 "목표역세권 개발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서남권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먼저 목표역 일대를 교통·상업·문화·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으로 개발하는 '목표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에 머물러 있는 역세권을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해 서남권 경제 활동을 견인하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목표역에 철도와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 지역까지 연계한 도시 정비를 통해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를 중심으로 무안·영암·신안을 연결하는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구현하는 간선급행버스 체계다.

민 의원은 "수도권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전남 서남권은 아직 체계적인 광역 교통망이 부족하다"며 "목표를 중심으로 서남권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광양 첨단 산업 고도화·암센터 유치”

정준호, 전남 동부권 맞춤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정준호 의원(사진)이 12일 여수시를 찾아 전남 동부권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양 관광 육성,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여수·순천·광양의 산업단지를 정밀화하 및 특수강 중심의 고부가가치 지대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단 순히 생산량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친환경 및 첨단 공정을 도입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것이다.

또 광주의 연구 역량을 동부권 산단과 결합해, 연구가 산업을 이끌고 산업이 다시 연구를 고도화하는 '지식 기반 생산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바다를 전락 자산으로 삼아 1000개 섬을 연결한 럭셔리 리조트 클러스터 조성안도 발표했다.

고급화되는 글로벌 관광 추세에 맞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일자리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 서울'이 아닌 '인 광주전남'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통합의 출발점일 뿐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광주의 장점과 전남의 장점을 모아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며 "통합특별법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요트 마리나 산업 육성 및 국제 요트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리조트와 해양 스포츠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해양 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 순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순천의 생태 자산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K-디즈니'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암 발생률이 높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책임 암 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업·문화·관광·의료복지가 공존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으로 전남 동부권의 느려진 성장 엔진을 다시 빠르게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김동찬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동찬, 광주 북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최고 복지는 일자리... 구민 실질적 필요 안길 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찬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6·3 지방선거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구민 삶에 실질적 필요를 안기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지역을 지탱해야 할 양질의 일자리와 자생적 경제 생태계가 흔들리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있다"며 "안주하는 리더십으로는 북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없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자족형 경제 공존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과거 북구의회의와 광주시의회 의장을 두루 거치며 쌓은 광역 행정 경험

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광주경양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내며 쌓은 실무 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광역 스타트업 밸리 및 노후 산업 재생 △판다 이코노미와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관광·일자리 창출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첨단 스마트 물류 거점화 △31사단 이전 등 도심 공간 대혁신 △스마트 재난 안전망 구축 △주민 성장펀드 도입 △고품질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동찬 예비후보는 "빈약한 구의 재정만 탓하며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단 한 톨의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투명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구민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공약 발표

“24시 울케어 돌봄 체계 등 구축할 것”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12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 보육, 생활 교통, 정주환경 분야와 생활 인프라 혁신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젊은 도시 광양의 미래를 위한 광양 책임 교육, 보육을 실현하겠다"며 "기존 돌봄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광양형 24시 울케어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돌봄 인력을 기점으로 파견하는 긴급 방문 돌봄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어린이집과 다양한 돌봄으로 아직 부족하다"며 "젊은 부모들이 광양을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인구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안심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광양 진학 맞춤형 멘토센터 구축'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



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직 교사, 법조·의료·공학 등 전문직 은퇴자를 '전문 멘토단'을 운영, 진학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연계한 대학 캠퍼스 유치'도 약속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협력해 철강·항만·물류 분야의 산업 특화 계약학과 중심의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며 "계약학과 졸업생에게는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적용하게 하고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형 인재 육성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전남도 드론 행정 확대...예산 4억 절감

개발지역·현안사업 고정밀 촬영...행정 의사결정 지원

전남도가 자체 운영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영상 행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행정 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남도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운영한 드론을 통해 2025년 기준 119개소, 138㎡ 규모의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해 약 4억 1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와 남익산도시 등 주요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밀 항공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신 영상 데이터는 토지 이용 현황 파악과 각

종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도 실과소에서 요청한 도민 참여 행사나 공공건축 심의 대상지 등 주요 현안사업 현장도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촬영·지원하면서 현장 파악과 행정 대응 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올해도 도 실과소와 시군 신청을 받아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드론 영상 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태양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테이터 등 주요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밀 항공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최신 영상 데이터는 토지 이용 현황 파악과 각